

특별기고



이재남

광주시교육청 정책국장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하시며 혀를 끝끝 차실 것도 같다. 7살이나 파격적으로 내려온 피선거권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는 미성숙한 인간의 경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로 교육학의 근본 문

‘고3’ 시장·국회의원 시대를 맞이하며

제이기도 하다.

교육학에서는 발달단계를 잘 고려하는 것을 모든 교수법의 기본으로 한다. 흔히 하는 말로 눈높이교육이라 말 할 수 있다. 법인들은 이 눈높이교육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나이가 어리면 경험의 양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발달단계에서 따라서 경험해야 할 아이들의 경험 총량은 100%여야 한다. 어린아이의 경험이라고 해서, 그 경험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되고, 짙은 다르지만, 반드시 충족해야 할 경험의 총량이 있기 때문이다. 경험의 양은 같지만, 그 짙은 다르다는 것이다.

행동·총량 제한해선 안돼

가끔 초등학교생들이 무슨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겠느냐,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발달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그 단계에 맞는 경험의 강도가 있다. 그 경험은 그 나름대로 100% 충족돼야 하며, 어리다는 이유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의미다. 물론 그 경험의 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험의 질적 차이가 있어서 나름대로 소화하고 내면에 축적한다.

어른들의 경험으로, 행동과 총량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오류는 경험 많은 교사들도 흔히 범한다. 경험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면, 낭떠러지나 물가를 향하는 아이를 붙잡는 상황에 해당할 것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오래 생활하면서 터득한 거의 본능적인 원리가 하나 있는데, 시뮬타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아이들의 경험에 대한 근본적인 욕구와 결핍을 다 채우기 전에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는 의미다. 흔히 말하는 ‘중2병’이나 ‘ADHD 증후군’, ‘불리불안’과 같은 이상 정서·행동 등의 양상은, 발달단계에 맞는 경험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한다. 많은 경우 이런 증상들은 시간과 경험이 주어지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그때그때 충분한 경험을 하고, 결핍 없이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경험이 쌓이고, 그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대하는 태도를 갖게 되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 경험을 재구성할 수가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고3이면 시장이나 단체장, 국회의원도 출마할 수 있다. 우리 교육청

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금액의 예산을 학생자치회에서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경험을 충분히 하게 되면, 앞으로 경제활동이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발달단계에 따른 경험의 양은 100%지만, 저마다 준비 정도에 따라서, 경험을 소화하는 질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은 경험의 양과 질을 관리하는 전문성을 요구한다.

자기 경험 재구성

이렇게 보면, 학교에서의 경험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학교 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도 기획해서 집행해 보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발달단계에 따른 경험의 총량은 같고, 다만 그 질이 다를 뿐이다. 교육은 그 질적 차이를 내적 성장의 힘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 것을 그 본령으로 한다. 아이가 아장아장 걷지만, 최선을 다해서 걷는 것이기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다.

기고



정희막

광주 북구청 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의 위기와 변화 속에 임인년 새해를 맞이했다. 하지만 주어진 환경은 더욱 험악워지고 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와 도전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선 7기 북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자치구로 성장하고자 현장과 혁신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모두가 구민이 원하는 구

토적성산의 자세로 구민 행복 이룬다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코로나19 극복 힐링 지원 ▲북구 마을버스 노선 신설 ▲유유국·공유지 활용 청소년 차고지 확보(예산 49억 원 절감)가 우수 시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북구 마을버스는 기존 777번 1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해 788번과 799번 2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해 788번은 12월 31일부터 운행을 개시했고 799번은 오는 2월 중 운행을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화·두암·양산·건국동 등 지역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가 높아지고 학생들의 통학여건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집에서 배우는 슬기로운 디지털 생활(정보화 교육) ▲광주시 유일 드론특화도시 조성·운영 ▲상승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문흥동성당 일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예산 90억 원 확보)

등도 선정됐다. 이번에 우수하다고 평가 받은 시책들은 코로나19 대응과 주민 생활에 밀접한 사업들이다.

선정된 우수 시책뿐만 아니라 민선 7기 북구는 소상공인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SOC사업, 공공임대아파트 활성화,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오롯이 민선 7기만의 열매라고는 할 수 없다. 그동안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선·후배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기관·단체, 구민의 성원이 밑거름이 됐음은 분명하다. 흙이 쌓여 산을 이룬다는 토적성산(土積成山)이란 말처럼 모두가 공동된 목적을 가지고 땀 흘린 소중한 성과인 것이다.

햇빛이나 달빛에 비치어 반짝이는 물결을 순우리말로 ‘운솔’이라고 한다. 현재 광주 북구의 모습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고 받아주면서 이뤄낸 아름다운 운솔이 아닐까 한다.

사설

‘남도장터’ 코로나 시대 희망 플랫폼

지역 대표 온라인쇼핑몰인 남도장터의 매출이 거침이 없다. 지난 한해 매출액이 54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다. 남도장터 매출액은 2018년 5억4,000만원, 2019년 63억 8,000만원, 2020년 326억원으로 급성장한 데 이어 지난해 연말 기준 541억원을 기록해 전년 매출액보다 66%나 성장했다.

남도장터 입점 업체도 갈수록 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입점 업체 수는 1,650개, 상품 수는 2만5,462개로, 온라인 회원 수도 33만1,000명을 넘어 2020년 29만4,000명 대비 13% 늘었다. 남도장터의 인기 상품을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0대 상품을 보면 쌀과 배, 고구마, 토마토, 소고기, 돼지고기, 전복, 김치, 한과, 건강즙 등이다. 생활 필수품목들로 매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별 구매고객 중 수도권이 31%를 차지하고 있는 점도 매우 고

무적이다.

이 같은 남도장터의 판매 확대 비결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소비로의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지속적인 상품 다양화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또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으로 상품 품질을 개선해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인 점, 농산물을 주기적으로 정기 배송하는 ‘구독경제’ 사업의 도입, 절임배추 김장 기획전·취약계층 체험활동 꾸러미 사업 등 신규사업의 발굴 등이 큰 영향을 줬다고 전남도는 평가하고 있다.

남도장터는 이미 전남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대표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로 우뚝 섰으며 온라인쇼핑몰의 플랫폼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농어민, 소상공인, 식품업체 등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쇼핑몰 모델을 만들겠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5·18 진실규명 이제는 매듭지을 때

새해를 맞으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80년 5·18민주화운동’의 실제적 진실과 미완의 과제가 해결될지 관심거리다. 4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종 발표명령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신군부 핵심이던 전두환, 노태우 씨가 지난해 사망하면서 최종 발표명령자 등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가 더욱 힘들게 됐다.

야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도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 차기 정부에서 실현될지 두고 볼 일이다.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5·18보상법을 위헌으로 판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도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 2019년 5월 출범해 2년여간 남게 활동했지만 진상규명 작업은 아직도 더디기만 하다. 조사위원회는 출범 이후 2번의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중간 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발표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등 실제적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게다가 전두환, 노태우 씨가 사망하면서 직접적인 증언과 사죄의 기회조차 사라졌다. 최고 책임자들이 세상을 떠났으나 그동안 조사에서 의미 있는 성과는 있다.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50여 명의 시신을 광주교도소 일대에 암매장했다는 계엄군의 구체적 진술이 나왔다. 발표명령 체계의 실제가 드러났고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 광주진압작전 관여 사실도 밝혀졌다.

이제는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을 얻고 있다. 별도의 특별 입법을 통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도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18민주화운동, 42년의 한이 담긴 ‘5월 숙원’의 끝을 맺어야 할 때다.

특지광장

요즘 키크라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필자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궁금해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키크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로 도로에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마치 고라니 같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키크라라는 말이 재미있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키크보드 피해로 이런 말이 생겼을까 싶어 서글픈 마음도 들었다.

요즘 키크보드가 시중에 시판되면서 직장인과 일반인은 물론 학생, 대리운전업체 종사자까지 그야말로 대중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이용자 또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라면 한 번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곡예운전을 하며 갑자기 골목길이나 주차된 차량 앞에서 불쑥 튀어나오거나 차량 사이를 빠른 속도로 뱅글뱅글 돌리는 키크보드 때문에 가슴이 철렁한 적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길에서 전동 키크보드를 타는 사람들이 낮선 풍경이 아닌 지 오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전동 키크보드를 이용할 경우 유념해할 점이 있다.

바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시행되면서 키크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며 면허 없이 키크보드를 타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헬멧을 쓰지 않으면 2만원, 두 명이 한 대에 올라타면 4만원이 부과되고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10만원이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법칙금 조항을 숙지하고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전동 키크보드도 자전거에 준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되며 자전거 도로 혹은 차도를 이용해야 한다. 인도를 주행할 경우 범칙금 3만

‘키크라니’ 규제 법 시행 경각심 가져야

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키크보드 운전자들이 안전도 등 보호장비 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밀리는 차도보다 운행이 자유로운 편에 속하는 인도를 운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보행자와의 충돌 우려성도 상당하다.

물론 키크보드 운전자 입장에서야 키크보드가 주행차로의 자동차 속도를 따라잡을 정도의 속도가 나지 않는 데다 차도를 운행할 경우 가장자리 차로를 운행하려다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미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인도를 운행한다고 고충을 토로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전동 키크보드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사고도 증가하면서 2018년 225건의 전동 키크보드 사고였던 것이 2020년에는 3배가량 늘어난 897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이제 전동 키크보드 사고 여파도 가히 무시할 수 없을 시대에 살고 있다. 더욱이 요즘 대도시 주변 및 유명 관광지에서 공유 키크보드까지 등장하면서 전동 키크보드와 보행자 간 충돌 부상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키크보드를 단순 소형 개인 이동수단이나 자전거를 타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절대 면허 없이 키크보드를 운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인도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되는 교통사고로 처리된다는 사실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동 키크보드 운행자들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자신의 안전도 모와 더불어 보행자의 안전도 우선시하는 인식 전환으로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인명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안보의사과

‘포스트 코로나’ 사회적 약자 돌봄 절실

기지사침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광주지역 복지 시스템은 곳곳에서 축소됐다. 의료복지를 제외하면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저소득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원이 중단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또한 매일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던 무료급식소는 하나둘 문을 닫았고, 독거노인들은 경로당, 복지관을 이용할 수 없어 방 안에 홀로 남겨졌다. 교육 기관이 문을 닫으면서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돌봄 공백 환경에 놓였다.

특히 보육원과 그룹홈 등 시설 보호 아동들이 감내해야 할 고통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 단체 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은 감염의 우려 속에 사회와 철저히 단절돼 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악화한 지난해 등교도 할 수 없어 시설 안에서만 생활해야 했던 아이들은 한층 강화된 방역 체계 속에서 정신적 외로움을 견뎌야만 했다.

지난해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사회 복지시설 방역 수칙이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각 시설의 판단에 따라 외출·면회 등 외부와의 접촉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단절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백은 커지고, 이들이 사회로 돌아와 일상에 복귀하는 데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

김민빈
사회부 기자

요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가 정착한 미래를 눈앞에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환영만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새로운 소통의 대안이 불러를 변화는 어떤 이면을 가지고 있을지 벌써부터 서늘하다.

대면 활동이 줄어들면 주변의 이웃과 약자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폭은 줄어들고 사회 안전망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대면 봉사 축소로 복지사각지대가 늘어나면서 고독사·무연고사 발생률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고립되거나 외면되어선 안 될 것이다. 모두를 함께 돌보고 발맞춰 가기 위해서 실질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신고	182	▲인강 알콜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국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 치 부 (062) 720-1060-62 경 제 부 (062) 720-1066-67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사 회 2 부 (062) 720-1043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문 화 부 (062) 720-1071 사 진 부 (062) 720-1040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편 집 부 (062) 720-1073 논 설 실 (062) 720-1006 전 산 실 (062) 720-1033 월 간 국 (062) 720-1007 판 매 국 (062) 720-1004 사 업 국 (062) 720-1011, 1099 광 고 국 (062) 720-1016-17 관 리 국 (062) 720-1012	기사제보 •TEL (062) 720-1050-53 •사회부 010-5601-2219 •FAX (062) 720-1080 •E-mail jndn@chol.com 광고문의 •TEL (062) 720-1016-17 •FAX (062) 720-1020 •E-mail jnmi1000@hanmail.net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